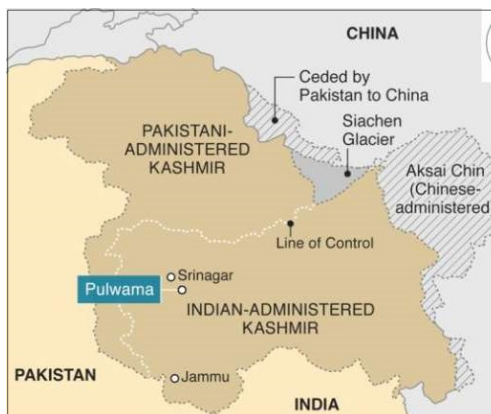




<b>EMERiCs</b>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a href="http://www.emerics.org/">http://www.emerics.org/</a> 2019. 04.03.   인도남아시아	<b>「동향세미나」</b> <b>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국경 분쟁의 영향과 전망</b> 작성   송영철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

- 2019년 2월 14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근거지로 한 테러단체인 JeM의 인도 ‘풀와마’지역 폭탄테러 이후 현재까지 양국의 군사적 충돌 및 대치가 지속<sup>1)</sup>
- 양국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 내 테러 근거지에 대한 인도의 보복 공습과 파키스탄의 인도 공군 기 격추로 최고조, 최근 국제사회의 촉구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통제선 인근 국지적 충돌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양국 충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특히 미국은 파키스탄 내 근거지를 둔 테러단체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를 지지
  - 3차 카슈미르 전쟁 이후 인도를 대상으로 한 파키스탄 기반 무장단체들의 테러는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 이에 인도정부는 파키스탄이 이를 묵인, 또는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키스탄은 지속 부인해옴.
  - 인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JeM과 지도자를 국제테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UN안보리에 요청해왔으나 중국이 반대하면서 무산<sup>2)</sup>

그림 1. 카슈미르 지역 국경 분쟁 현황



자료: 언론자료 종합

표 1. 양국 카슈미르지역 분쟁 경과

구분	주요내용
1947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인도, 파키스탄 분할
1947~71	양국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1~3차 전쟁), 분할 통치 합의, 군사통제선(LoC) 구축
2019.2.14	파키스탄 무장단체(JeM), 인도령 카슈미르 내 자살폭탄 테러, 인도경찰 40여명 사망
2019.2.26	인도정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발라코트 지역 무장단체 근거지 폭격
2019.2.27	파키스탄, 인도 공군기 2대 격추 및 조종사 억류
2019.3.1	파키스탄, 인도 조종사 포로 송환
~현재	통제선 인근 국지적 군사충돌 지속

- 군사 충돌 이후 파키스탄은 포로 송환, 테러단체 제재 이행 등을 통해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파키스탄을 지속 압박

1) Jaish-e-Mohammed의 약자로 ‘무하마드의 군대’ 라는 뜻임.

2) The Economic Times(Feb 28, 2019). ‘US, UK and France ask UN Security Council to ban JeM chief Masood Azhar’ .

- 테러 직후 인도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MFN지위를 철회하고,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함.<sup>3)</sup>
  - 2018년 기준 파키스탄의 대인도 수출은 4.8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sup>4)</sup>
- 또한 인도는 양국이 1960년에 맺은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조약’을 철회하고, 주요 지지국가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UN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
  -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JeM과 지도자인 ‘마수드 아즈하르’를 UN국제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UN안보리에 다시 제안, 반면 중국은 양국 군사충돌 자체를 촉구할 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인도가 파키스탄과 공유하고 있는 상류 인더스강의 수로를 차단할 경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지역 농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한 파키스탄은 인도 공군 조종사를 송환하고 파키스탄 내 테러 집단(UN 테러리스트에 포함된)과 개인에 대한 자산 및 금융거래 동결 조치를 발표함.

표 2. 군사 충돌 이후 인도, 파키스탄의 대응조치

구분	주요내용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MFN지위 철회, 수입상품에 대한 200% 관세 부과 -인더스강 상류 수자원 공유 조약 철회 -호주의 대파키스탄 원조 및 군사협력 중단 요구 -UN안보리에 JeM과 지도자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요구 -자살폭탄 용의자 44명 체포, 파키스탄의 적극 대응 촉구
파키스탄	-UN 중재 요청 -UN안보리 제재 이행 발표(JeM 등 테러단체 관련 자금, 자산 동결 등)

자료: 언론자료 종합

- 분쟁이 격화될 경우 양국 모두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인도 모디정부가 이를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농민 및 빈곤층의 지지율 하락으로 최근 주(州)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모디 정부는 이번 군사 대응을 통해 힌두기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

3) 인도는 1996년 파키스탄에 MFN지위를 부여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파키스탄 기반 무장단체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MFN지위를 유지해옴. 한편 파키스탄은 대인도 수입에 대해 2012년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리스트로 전환했으나(1,209개 품목 제외), 실제 수입 가능한 품목은 137개에 불과함(livemint (2019.5.12.). ‘Withdrawing Pakistan’s MFN status will divert trade’).

4) 2018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는 약 24억 달러로 인도 전체 교역(2018년 약 7,700억 달러)의 0.3%, 파키스탄 전체 교역(약 800억 달러)의 3%수준임. 양국 비공식 교역은 공식교역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Worldbank. 2018. ‘A Glass Half Full: The Promise of Regional Trade in South Asia’ ). 파키스탄의 대인도 수출 품목은 건조식품류, 시멘트, 화학물, 오일류, 알루미늄 등이며, 인도는 섬유류, 식품류, 유기화학제품 등을 파키스탄에 주로 수출함.

- 모디 정부가 과거 수차례 무산되었던 JeM의 UN안보리 테러리스트 지정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경우 지지율 회복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경제여건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군사 충돌이 보다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인도보다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 보유국이지만 양국의 경제적(인도 GDP 2.6조 달러, 파키스탄 GDP 3,000억 달러), 군사적(인도 군비 138억 달러, 파키스탄 국방비 27억 달러) 격차는 상당히 큼.
- 최근 파키스탄은 재정적자 확대(GDP 대비 6%), 외환보유고 고갈(약 80억 달러), 인플레이션(9.9%) 등을 겪고 있으며,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임. **EMERiCs**

#### 참고자료

Livemint, The Economic Times 등